

통일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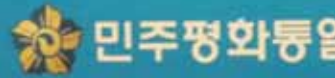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통일



동일 Focus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과는 10월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11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데 이어 11월 2일에는 3년6개월 만에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한반도 통일환경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교와 한반도 통일

일자문회의



와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와 김종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김태현 중앙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는 또한,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등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통일외교와 우리의 통일준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10월 23일 진행된 좌담회의 내용을 발언록 형태로 정리했다.

한반도 통일 비전 명확하게 제시 주변국 이해 확산하는 통일외교 펼쳐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간 갖고 신뢰 쌓아가는 과정 필요해

● 유호열 고려대 교수(사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평통에서 발간하는 <통일포커스>는 하나의 큰 주제를 선정해서 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언록 형태의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근혜정부

통일Focus

▶ 좌담

- 유 호 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김 중 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 김 태 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 흥 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박 형 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 제 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통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2년 반을 지나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하여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킨 ‘통일대박론’ 등을 포함해서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그 다음에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노동당 70주년 행사가 있었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8.25 합의 이후 남북 간에 새로운 교류협력이 시작되고 북한이 변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는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경제, 사회 변화, 그리고 북한핵 등에 관해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 9월 3일에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주변국 외교와 유엔 외교 등 통일외교가 괄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외교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 극복해야 될 난관 같은 부



중국 측 학자들도 처음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나 지금은 과연 남북관계에 신뢰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들, 남남갈등과 같은 극복해야할 과제라든지, 우리의 통일 역량과 의지 등 통일준비 작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해서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칼럼도 많이 썼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도사’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도 처음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남북관계에 신뢰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북한이 박근혜 정부 취임 직전에 핵실험을 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만 중

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 권력세습 문제가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지장 초래해

● **유호열** : 박형중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 3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격랑의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해서 힘써 왔다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 격랑의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지난 8월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대표단이 악수를 하고 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핵 능력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북한의 도발에 의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유발, 고조되었습니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2013년 3~4월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 위협을 고조 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새로운 핵실험을 거듭하며 위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한의 권력세습 문제입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그들의 ‘최고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조준사격으로까지 위협했습니다. 즉, 권력세습 문제가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장 상황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면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당국 간 대화, 그리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두었던 결실 중의 하나가 8.25 남북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성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문흥호 교수님과 일맥상통하면서 북한의 권력세습과 북

한 내부의 요인을 연관 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제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저는 우선,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2013년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대 권력을 세습한 이후, 5월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1월에는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권력을 잡았고 2013년 1월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곧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반도 관련 국가 모두에 새로운 권력이 출범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이 유동적으로 재구성된 셈이죠.

이와 같이 주변국가들이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판을 짜 놓은 상황에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국의 상황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추진 및 통일·안보 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에 새로운 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국정기조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오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구상을 밝혔다.

각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변동은 지역질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3년 초기만 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희망적 관측이 주류를 형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2013년 2월 12일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의 기대감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한반도를 시대적 소명으로 설정하고 외교, 안보, 통일 분야 3대 국정목표를 행복한 통일, 튼튼한 안보, 신뢰외교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튼튼한 안보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

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억지력과 안보가 강조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권력세습에 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여건이 어렵게 된 것이지요.

일관성 · 유연성 통해 주변국 지지 확보

● **유호열** : 당시 상황이 좋은 여건은 아니었죠. 한반도 주변국가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북한의 핵실험도 있었습니다.

● **안재노** : 예. 게다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자국의 봉쇄전략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이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일본에서는 재집권한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재무장론을 들고 나섰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 뿐만 아니라 우경화 계획을 본격화 했습니다.

또한 중·일간 역사문제와 각국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과 더불어 북한의 빈곤과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담요인들을 극복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통해 주변국의 인식 변화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북한의 도발 등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력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지요.

더욱이 그러한 노력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인권 문제 뿐 아니라 대북 지원, 핵·미사일 이슈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에는 박근혜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 **유호열** : 안 박사님은 박근혜정부 취임 초기, 어려운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통해 성과가 있다고 보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 앞에서 신뢰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신용 회복 절차를 통해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지루합니다. 신뢰프로세스도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는 70년간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준비는 되어있는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장애물

을 피해 도로 옆으로 달린다든지, 필요하다면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달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정부는 정해진 도로 위에서 규칙을 지켜야만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갖는 논리적 타당성과 명분은 개성공단 폐쇄사건과 목함지뢰사건을 통해 더욱 부각됐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 변화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될 것

● **안제노** :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기준을 설정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틀에서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합니다.

통일의 관점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평가하는 것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의 관점에서 각 분야의 기능과 평가를 하는 것과 각 분야의 기능적 측면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교류·협력 및 남북관계로만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성과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의 속성을 이해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문제해결의 수단입니다. 정책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어떠한 정책이라도 추진여건과 환경에



지난 10월 22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작별상봉 행사를 마친 이산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특정 사안만을 놓고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과 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 변화하고 진화해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이며,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여 동북아의 불신과 대결의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특정 사안만을 놓고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과 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연관 지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북한의 변화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그럼 안박사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할 수 있을까요?

● **안제노** :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국정기조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나 교류

협력 등 단일변수만을 가지고 신뢰프로세스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나름의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이 남북 간의 신뢰인데,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논의를 확산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통일대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작은 통일론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만 북한의 변수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작은 통일론 등을 통해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유연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초기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남 위기 고조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도발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행동과 북한의 ‘한국 정부 길들이기’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는 확고한 원칙을 통해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 병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남 위기 고조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도발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도 중요하다.



다고 봅니다.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설정하고 통일대박론 등 적극적인 통일론을 설파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통일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여겨 집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뢰프로세스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

● **유호열** :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현 중앙대 교수** : 신뢰프로세스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오랜 동안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구축했다가도 한 번의 행동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뢰를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reciprocity, 즉 상호주의 또는 호혜성과 연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혜성은 곧 행동의 상응성을 말하

는데 여기에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등가성이라고 해서 그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을 간과해 온 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냥 무마하거나 오히려 보상을 하는 것은 질적인 상응성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도발을 하고도 보상을 받고 더 큰 보상을 바라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고, 선의에는 선의로, 악의에는 악의로 대응하는 그런 질적인 상응성이 곧 신뢰이고, 남북 사이에 그런 신뢰를 심는데 2년 넘게 걸린 것이죠.

저는 내년쯤이면 남북관계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013년 봄 개성공단 사태와 지난 8월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의 대응을 통해 질적인 상응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지난 10월에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적



지난 8월 4일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육군 장병들이 '목함지뢰' 폭발에 의해 부상당했다. 사진은 목함지뢰 폭발 현장(합참공보실 제공)

인 상응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나간다면 향후 2년 동안 모종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숙성의 기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토대를 만들고, 또 북쪽에 대해서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고 그동안의 학습효과까지를 포함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안제노** : 저도 김태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쌍방 간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뢰는 한 마디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는 곧 주관적인 인식의 결정체로 남북한의 문제에서 신뢰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며, 신뢰의 대상 또한 남한과 북한입니다. 일부에서는 왜 우리가 신뢰를 주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데, 신뢰라는 문제가 어디까지나 쌍방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역시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간의 믿음을 끌어내는 것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남북 당사자 간의 준비와 주변국과의 준비, 우리 국민들의 준비였습니다. 통일은 마치 한 채의 집을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달리하며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 안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죠. 통일이 남과 북의 정성

을 모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에 당연히 그 집이 견고하고 가치가 있으려면 허투루 벽돌을 올릴 수
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즉, 남북 간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신뢰,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차
근차근 쌓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점차적으로 스스로 변화하여
우리게 신뢰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북한 경제, 구조적 불안정의 잠재성 증가하고 있어

● **유호열**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
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북한경제는 어느 정
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나 지지도가 약하다고 보기도 하고, 북한경제가 연 7% 정도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중국경제가 침체되면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외화
벌이가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5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번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도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인민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북한 경제와 북한의 대남정책, 대외관계, 북한의 생존 유지전략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중** :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내구성 여부는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먼저 정치 측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금년이 4년째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력 승계는 대체로 종료됐다고 봅니다. 2016년 7차 당대회 개최는 일종의 자축 기념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세력 재편이 있었다고 봅니다. 세력 재편을 통해 새로운 주도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주도세력에 편입되지 못한 인사들에게서 일종의 이탈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탈북자 중에 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력 재편 과정은 2015년 말 현재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독재체제의 속성상 숙청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의 경제적 측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 북한 경제가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 분야에서 구조적인 불안정의 잠재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중국경제가 침체되면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외화벌이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각국 정상들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중국 텐안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세력 재편이 있었고 세력 재편을 통해 새로운 주도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주도세력에 편입되지 못한 인사들에게서 일종의 이탈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히 북한 수출의 50-60%를 차지하는 광산물의 국제가격이 2010년이 100이라고 한다면 2013년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최근 다른 방향으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당 창건 7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해외 무역지도원이나 외교관들에게 외화 할당량을 증가시켜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외화 할당량 증가로 인해 일부 외교관이나 무역지도원들이 탈북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제노** : 최근의 방송에서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지역의 북한상인들 중에 금시계를 찬 사람과 금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상인들이 악어가죽으로 된 지갑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고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나진·선봉과 같이 특구 지역은 아니지만, 북한주민들이 장사는 당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단속 보안원에 집단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 주민들이 장사 행위에 대한 인민보안부의 단속에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단속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장사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장사행위에 대한 통제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게 완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장사를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행위’를 당국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당국도 배급을 줄 여건이 안 되니 장마당 통제를 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통제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던 것이 고위급 숙청 사건에 이은 계층별 이동현상의 심화입니다. 대규모의 숙청으로 인해 권력상층부가 하층계층으로 추락하고 권력중층부가 권력상층부로 올라가고 또 하층부



결국 김정은 정권이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도 희생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 중층부로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민심이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가는 과정이 또 다른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고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체제유지를 위해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고 국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려움을 짐작케 합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도 희생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현실과 체제유지라는 딜레마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지속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히려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을 포기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해 개혁개방을 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령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걸 정말 과감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져 좀처럼 해법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 딜레마 속 미국과의 협상에 집착하게 될 것

● **유호열** : 핵 · 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한체제가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 **김태현** : 저는 북한 핵무기의 효용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겁박하여 뭔가 얻어내려는 시도가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비확산 레짐이 강화되고 있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효용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제제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부담은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것이 집값이 오를까 봐 은행에서 빚을 내어 집을 사 놓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집값은 더 떨어지고 유지비와 이자만 자꾸 쌓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파는 것이 해법입니다.

현재 북한핵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떨어지는 집값에 전세 대란과 깡통 전세 등 국내 부동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상황이 실감나게 이해됩니다.

● **박형중** : 북한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은 역설적으로 북한 핵 무기 개발입니다. 핵 무기 보유는 최후의 순간 북한의 정권 안보를 보장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 무기 보유 고수 과정은 북한 정권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적 고립, 국제적 제재, 대외 경제협력 가능성의 현저한 제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북한 대내 변화 유도 압력 등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핵 무기 보유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핵국가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북한 주도로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능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개최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류원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과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력을 계속 증강해 가지만, 이는 남북관계에서는 논외로 하고, 남북관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이러한 구조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성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에 있어 양보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재진입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평화체제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아졌다는 북한경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변화

● **김중호** : 북한을 보기 전에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북한에 관련된 정보가 대체로 정부로부터 나오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도 있고, 대북 사업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NGO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보들 중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혼탁한 기류를 형

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로 북한에 대한 오해라든지 북한에 대한 편견, 또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예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3차 핵실험을 했고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남한 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오해의 부분은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인데요. 앞서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선이나 평양 등 한정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0월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핵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될 것이다.



된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 남한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북한이라는 큰 집단의 전체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부분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 과도기적 현상을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혼동하여 설명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학자 그룹에서 지적하고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제노** :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추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문제인데, 현재로는 그것 또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개방을 하게 되고 시장경제와 외부문물세계를 주민들이 접하게 된다면 수령체제 자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대북 화성기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최고 존엄’과 더불어 자신의 위상문제가 가장 컸던 부분이지요.

이처럼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핵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데 중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金正은 체제의 유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특히 대남정책에서 우리를 봉쇄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정상적인 부분에서 남북관계를 끌어가려는 노력은 아직까지 크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장마당 활용하는지 지켜봐야

● **김중호** : 저는 2012년에金正은이 공식 등장한 이후에 적어도 3년~5년 정도는 권력을 공고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金正은이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자기 업적을 만들어서 존재감과 영도력을 드러내는 작업에 집중할 것이고, 그



지난 10월 15일 중국 라오닝성 단둥에서 개막한 제4회 북중 박람회에 출품된 북한 생활용품이 중국 소비자의 인기를 끌었다.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을 우리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군사력을 과시해야 되고 또 경제력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경제력을 부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과 장마당을 분리해서 보는 순간, 북한 영도체계의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을 우리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하나의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나진선봉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특별구역에는 중국 상인들과 조선족들이 드나들고 있고, 위안화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중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MOU에서 체결한 실제 액수가 제대로 북한에 들어갔는지를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통해서 체크합니다. 그러나 실제 MOU 내용대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금시계나 루이비통이 진짜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양한 고가 물건들이 나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선 경제가 상당히 활발해 보입니다.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평면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정보를 결합하여 입체적 비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7%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요?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중호**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2012년 이후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012년에, 그리고 건설업 성장률은 2014년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추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지난 4년간 1%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성장률 등 북한경제 통계들이 북한경제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북한의 예산 규모와 수출입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경제 성장 변화의 폭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 구성요소들이 남쪽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추정하는 것들이므로 정확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등 몇몇 통계 자료는 북한 경제 변화의 추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폐쇄

적이고 비정상적인 북한의 경제 상태를 그것에만 근거하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안제노** : 김 박사님의 설명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상황에 대한 판단, 또는 심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북한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나진선봉지역에서 중국 상인들이 찬 금시계와 금반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북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북한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나진선봉이 특구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북한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장사를 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장마당이라는 것이 서구시장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기대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수치로만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계나 수치로 보는 북한과 더불어 상황적인 판단이나 심리적인



수치로만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계나 수치로 보는 북한과 더불어 상황적인 판단이나 심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북한을 보아야 한다.



판단에 의해서도 북한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흥호** : 저는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아닌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통일에 무관심했던 많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나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의 비협조와 함께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의식하면서 다소 조급하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정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김정은이 인민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북한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

핑 주석 간의 개인적인 신뢰는 매우 확고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신뢰관계가 곧 한중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지도자의 관계가 한중관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민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민의 행복은 차치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김정에 대한 인식이 곧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진핑과 김정은의 관계가 곧 북중관계를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북중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김태현** : 북한의 변화는 북한 내부의 사정과 더불어 국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핵무기의 포기 가능성 등을 보는데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 주민들이 더 잘 살게 되었다 혹은 경제가 성장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장마당의 활성화, 곧 시장화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성장했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든지, 농산물 작황이 좋아지든지, 무역이 많아지든지 등등 실물 부분이 좋아져야 하고, 또 유통 과정이 많아져서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북한에 자동차가 많아지고 금시계를 차고 금반지를 끼는 것들은 전체 경제가 성장했다기 보다 시장화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는 더 못 살게 되는데 부의 이전이 돼서 소수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초점을 두면 전체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얀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진행되면서 시장화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군부에 줄을 대고 군사정권에 줄을 댄 사람들만 잘 살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전

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좋아진 것이죠. 북한의 시장화 현상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흥호** : 지난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기념행사에 중국의 류원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중국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북한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김정은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관계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을 왜 버리겠습니까? 미국, 일본과의 관계, 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유용한 전략적 자산인데 왜 북한을 버리겠냐는 것이지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시 주석이 ‘조선식 사회주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전을 보내고 류원산이 방북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북중관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문제가 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중국 측 학자들은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북중 경협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 북중 경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중 경협



북한에 자동차가 많아지고 금시계를 차고 금반지를 끼는 것들은 전체 경제가 성장했다기 보다 시장화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은 공식적인 부분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저는 북한 스스로 중국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실제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등을 계속 강조하지만 내심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북한 핵에 관한 중국이나 미국의 정책과 태도를 보면, 북한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 **유호열** :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내부 상황, 북한의 대외관계, 그리고 북한핵문제 등에 관해 말씀해 주

셨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통일준비, 그리고 새로운 통일론에 관한 전략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 **김태현** : 저도 문흥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대박론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면서 통일을 서두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이런 통일 구상과 통일 로드맵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대박론이 통일 열기를 높이는 대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곧 통일외교의 문제입니다. 통일외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곧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과 불신을 제거하는 소극적 측면과,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적극적 측면이 그것입니다.

일단 한반도 통일이 한민족, 혹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주장하여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과정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한지의 문제인데 국제문제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차원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국에 한반도 통일 모습 담은 ‘한국몽(韓國夢)’ 제시

● **유호열** :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와 우리가 나서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동북아 정세를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중호 박사님.

● **김중호** : 우선 중국경제가 연착륙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현상이 북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에서도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동북3성은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현물의 ‘물



**통일이라는 ‘지각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통일되기 전의 한반도와 통일된 이후의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범지역적 구상이 필요합니다.**



줄기’도 더욱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미·중 간의 군사적인 기 싸움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일본이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해 가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 접근하는 일본의 전략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등 여러 변수들이 한반도 주변정세를 급반전시키고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그렇고, 또 주변국들에게도 한반도 통일의 모습을 담은 ‘한국몽(韓國夢)’을 제시하고 실천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통일의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정책과 동시에 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북한을 개발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정책의 대상이 북한만도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발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지각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통일되기 전의 한반도와 통일된 이후의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범지역적 구상이 필요합니다.

● **박형중** : 지난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인민을 강조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인민을 앞에 내세우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거 북한이 인민을 앞에 내세운 것이 실효성을 가졌다면, 지금의 북한은 아마도 천당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민 중시의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대외정책으로 긴장완화정책을 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긴장완화정책 추진하면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제재도 완화될 것이고 대외 경제협력과 경제 지원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0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반도 통일과 유럽연합의 역할'을 주제로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일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정책은 핵 능력 증강, 재래식 군비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金正은이 인민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이고 사치성적인 지출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병식을 하는 데도 2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지출을 줄이지 않고 말로만 인민을 강조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金正은이 이런 식으로 절실하게 인민을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국의 대북 인권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14년 11월과 12월 북한의 모든 대외정책 문서에서

대북 인권 ‘소동’을 중단하게 하라는 요구가 등장합니다. 북한이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인권정책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압력은金正은이 표면상으로 인민을 더 자주 말하게 만들었고, 애육원(고아원)도 방문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마치 북한 정권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인권 침해나 주민생활 곤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말하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 북한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중호** : 더불어 올해 말 출범하는 AIIB가 어떤 식으로 동북아시아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금융이라는 수단을 외교 정치적으로 더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북아개발은행에 관해 언급하셨습시다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금융협력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들과 연계하여 대형 개발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상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외교력 수준에서 그런 역할을 모색한다면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적극적인 태도 갖게 해야

● **안제노** : 김중호 박사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대에 맞는 발상의 전환, 또 거기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그런 인식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3일 열린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신 것도 과감한 국민적 공감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통일론도 그런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통일의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정책의 문제를 봤다면, 이제는 정책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의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너무 조금 해지고 정치화되고 이벤트화 된 측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점에서 통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일이나 대북정책이 모두 정부의 몫이고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나 정책에 부합하는 국민의 인식,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통일의 과정과 결과는 사실 국민 스스로의 몫입니다. 국민 스스로 통일정책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 혹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강연이나 글들을 통해 통일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구성원이 통일이라는 사회현상과 부합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태도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문화는 통일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느낌, 감정, 태도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느낌, 감정, 태도는 순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좋은 느낌은 통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할 것이고 결국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표출될 것입니다.

결국 통일을 위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정부 만의 일이 아니며 국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감정을 갖고 태도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고 이벤트화 된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형중** :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잘 되었지만, 중요한 것이 남북 당국자회담을 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받아내지 않는 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편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에 대해 당국자회담을 갖자고 거듭 제안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하기 전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 북한의 신뢰성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전향적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때문에 5.24 해제 문제 등 한국이 어떤 제안이나 약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자면, 이번 기회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 확인의 과정, 그리고 이보다 더 전향적인 관계가 남북 간에 안정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여부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교류는 스포츠 교류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확대해 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된 생태, 환경, 민생 부분의 민간교류를 확대해 가면 남북 당국 간에 신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좀 더 큰 deal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가동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 당국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남북 당국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가고 그 후에 6자회담 재개 문제라든지 경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북한이 가장 침예하게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비방중상의 문제입

니다.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문제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준수되는 한 북한의 우려를 일정한 정도 고려해 주는 정책을 당분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는 단계별로 작은 약속에서 큰 약속으로, 또한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 지를 확인하는 점진적 신뢰 증축 과정을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5·24 조치의 폐지 문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5·24 조치를 푸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5·24 조치가 풀리자면, 즉 남북 경제교류가 재개되려면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과 연계되면 가장 좋은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한 평화통일 청년 한마당 행사가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14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됐다.

통일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제도화돼야

● **문흥호** : 저는 가장 좋은 통일외교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의 확대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통일외교를 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좋을 리가 없지요.

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을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다보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의 기회가 생길 것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로소 효과적인 통일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솔직히 시진핑 주석의 한반도 통일 관련 언급은 의례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중국은 1992년부터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얘기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감사의 표시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거론했을 가능성은 있지요.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와 자주 문제의 문제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자주적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여부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통일을 추진할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평화통일 논의에 앞서 우리 자체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만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준비는 중국의 ‘도광양희(韜光養晦)’ 방식으로 조용히, 차분히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되고 실천과 연계되지 않은 비전의 제시는 결국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일 관련 정책은 무엇보다 지속 가능해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권 차원에서 정치화되고 이벤트화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제노** : 예. 규범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 등은 명확하게 규범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합의서는 체결 주체, 대상 분야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공동성명, 공동선언,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다양한 형태의 합의서가 체결되어 현재까지 총 120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언제든 북한의 실리에 따라 번복되고 이행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는 다양한 합의서들은 남북한 공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검토를 거친 체결 당시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합의문, 공동보도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이해관계와 사전 준수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일



통일문화의식의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문화 한마당 행사가 11월 4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내고, 정부는 그런 규범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남북 간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행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8.25 합의 이후 북한의 새로운 행태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자신들의 실리 추구를 위해 유화공세와 강경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전히 벼랑 끝 외교행태를 지속하고 있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는 극단적인 협상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유호열** :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 내부적 과제와 실천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흥호** : 박근혜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저는 다음의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선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통일 관련 정책을 차분하게 되짚어보면서 향후 대북정책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매우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 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통일외교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나되기 위한 준비로서 상생, 공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야

말로 주변 국가들을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일이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체제의 비이성적인 모습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이러한 절실함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분노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정권을 이어가는 긴 호흡으로 통일준비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관된 정책 통해 북한 변화 이끌어야

● **김태현** :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물리적 우위 외에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수시로 겪어 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외국에, 특히 한반도와 거리가 있는 나라에 나가 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한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남북한에 고루 있다는 인식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꾸준히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우리가 평화 애호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면 보다 획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을 분석하면 가끔 노태우 정부 때의 북방정책과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작은 통일론의 기초 역시
통일을 위해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
자는 것입니다.**



때는 소련,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평양에 이르는 우회로라고 생각했었지요. 신뢰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외교정책 기초, 그리고 유라시아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중견국 외교 등 구체적 방안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북방정책은 획기적인 접근법이었고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은 한 가지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방정책의 종착지는 남북한 교차승인, 즉 소련과 중국의 한국 승인, 미국과 일본의 북한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소련 및 동구권, 중국과 수교한 외교적 승리에 취해 교차승인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잊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때 북한이 미국, 중국과 수교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외톨이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다 책임 있는 일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이 그 때에 비해 더욱 약화되고 고립된 만큼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동참하는데 전향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재노** : 저는 북한이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

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사안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의제를 제시하고 철회를 대가로 양보를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 속에서 북한은 강한 집착과 집요함으로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할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체제 안정화 과정에서 대남 강경정책을 유지하거나 대남 유화정책을 병행하는 등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선에서의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의 의도대로 국면전환을 위한 대내외 조치들이 이루어지 않고 계속 정체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고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출구전략이 아마도 한반도 긴장고조의 또 다른 강경한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통일의 일관된 원칙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작은 통일론의 기초 역시 통일을 위해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작은 통일론의 기초에 맞는 작은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좋은 느낌과 감정을 형성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민주평통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5일 오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께서 말씀하신 작은 통일론을 뒷받침하는 작은 통일운동을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중호** : 향후 2년 동안은 다양한 정치·경제 변수들이 국내외에서 돌출하여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는 내년 총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의 과정 속에서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므로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유지되고 전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는 내년 말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후 시기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느 정도로 보수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대테러전쟁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 수위를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유연성이 결정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규범 준수도 강조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적어도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북한 내부의 정책적 필요를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년 5월에 북한 노동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위민정치’가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한반도 관련국들이 각자의 계산에 따라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비전과 전략을 적극 공유하여 한반도 분단구조 변화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당연히 직간접적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을 적극 부담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대테러전쟁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 수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유연성이 결정될 것이다.



● **유호열** :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우리가 통일에 너무 매몰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주변국의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통일Focus*





이 자료집은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와 한반도 통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포커스 제10호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